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2. 15. (제 3 차)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2. 1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제3-32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위원회가 2021.11.12.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부과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유지하고 이행기간을 연장
- 자본금 증액, 영업 일부 양도에 준하는 조치 등을 통한 자기자본의 최소영업자본액 초과 충족
- 상기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게 반영된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23.4.1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23.7.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필요유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

1. 의결주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제3-32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2021.6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2021.11.12.)
- 이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2021.12.29.)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2022.1.26.)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22.6월말 기준 자기자본(78.91억원)이 최소영업자본액(77.72억원)을 초과(1.19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2022 상반기 영업손실이 △8.76억원에 달하는 등 주된 영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직후 손해배상소송 패소 선고(2022.7.21.) 등 소송 진행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 발생* 및 신주발행 무효소송(2022.5.24. 소 제기)에 따른 추가 자본 감소 가능성이 있음
- * 2022.7.21. 2심 패소(패소금액 4.55억원)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하여 1.37억원(패소금액의 30%) 2022.6월말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계상 → 최종 패소(2022.12.16. 대법원)로 5.55억원 지급(2022.12.22.)
- 2021.11.12.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 * 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2022.6.30.로 이행기간이 도래한 경영개선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야 함

- 1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사전통지 실시

-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의 사전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게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다. 관계법규 : (붙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경영개선권고) ~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3-3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및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3.2.9.) 심의필

㈜플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

㈜플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1.11.12.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여

202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78.91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77.72억원)을 초과하여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2022.상반기 영업손실이 △8.76억원에 달하는 등 주된 영업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직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선고(2022.7.21.) 등 소송 진행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 발생 및 신주발행 무효소송(2022.5.24. 소 제기)에 따른 추가 자본 감소 가능성이 있는 등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제3-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경영개선명령 유지

- 자본금의 증액, 영업의 일부 양도에 준하는 조치 등을 통한 자기자본의 최소영업자본액 초과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2021.11.12.자 경영개선명령을 유지

2. 경영개선계획 제출

- 상기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게 반영된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2023.4.1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2023.7.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필요유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생략>

□ 금융투자업 규정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 ⑨ <생략>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매해,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③ 합병·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1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3. 3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
 -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
 -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생략)

제3-3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②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0의3>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 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1) 필요유지자기자본
 -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 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2	02-3145-7699